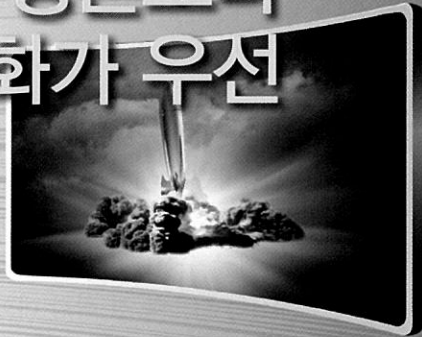


북한의 핵무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의 핵무장론보다 남북군사대화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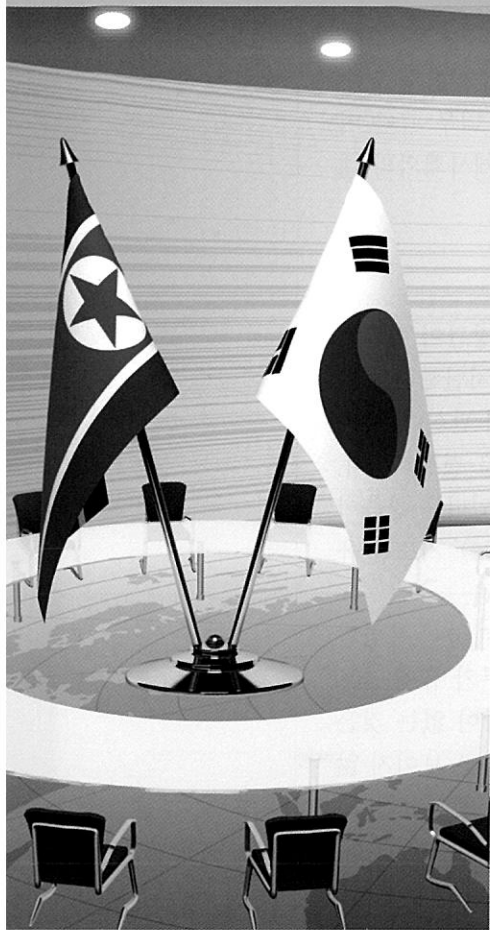


북한의 3차례에 걸친 핵실험 이후 대남 군사적 핵위협은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전시에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직접 공격하여 대량살상을 피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해 직접적인 핵공격을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버티고 있어서다. 북한의 핵공격시 미국의 대북한 핵 보복공격도 뒤따를 것이어서 평양 지도부는 선불리 핵공격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상호확증파괴, 즉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위협성 때문에 핵무기 사용이 그 만큼 어렵게 된다는 논리에서 기인한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자리 잡게 된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는 실제 대남 핵전쟁용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주한미국 억지력 제한 가능성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핵전쟁 위협을 수단으로 크고 작은 '비이성적'인 대남 군사도발을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실제로 북한이 핵위협을 지렛대로 하여 재래식 통상병기에 의한 보다 과감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지도부가 한반도 핵전쟁 위협 하나만으로 동맹 관계에 기반한 한·미연합군사력의 대북 억지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과장된' 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북한이 서해에서 보인 대남 군사적 공격에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다. 북한은 서해해상경계선인 NLL에 대한 단순 부정에서 출발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해상충돌을 자행하였다. 핵실험 이후에는 우리의 영토인 연평도를 포로 공격하는 그들의 '비이성적'인 군사 태세를 선보였다.

그동안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어 왔지만 전면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은 억제되어 온 셈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의 억지력에 기인한 바 크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으로 주한미군의 이 같은 억지력이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다. 예를 들면, 북한이 심대한 대남



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jeung@kinu.or.kr

글쓴이는 영남대학교 졸업 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연구실장 등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북한의 정치·군사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 및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외에도 경희대 겸임교수 및 국정원,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 주요기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군사적 공격을 벌인 후에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 운운하면서 협상을 제기해 온다면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반도 핵전을 우려하여 우리의 대북 군사적 보복을 자제토록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또한 '핵확전'이라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만 북한의 군사적 공격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수세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대비태세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북한 재래식 군사공격 방어태세 강화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나서 대남 재래식 군사공격이 대담해질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파키스탄의 핵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키스탄은 그들의 핵무장으로 강대국에 속하는 인도와 군사적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는 신념을 소유하게 되었다. 핵실험 이후 파키스탄은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인도를 은밀하게 재래식 군사공격을 단행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제한적이거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대해 인도가 즉각적인 보복 군사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3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한·미연합군과의 군사적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고 재래식 대남 군사도발을 보다 빈번히 감행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일종의 '제한전쟁'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제한전쟁'이란 핵우산 아래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비해 먼저 북한의 포 공격이나 대남기습침투를 위한 비대칭전력을 상쇄할 수 있는 전력을 개발·강화해야 한다.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즉각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서해 해상 경우, 북한이 NLL을 침범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처하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대남 군사적 타격을 가할 경우 '균형타격'이 아닌 '비균형 타격'을 위한 우리의 강한 군사적 화력을 전진배치할 필요도 있다. 한국군은 공격적 방어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재래식 무기를 기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배치·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장기전으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치고 빠지는'식의 재래식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재래식 공격을 해올 때, 이에 즉각적인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PAC-3, SM-3 미사일 등이 시급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즉각적인 보복공격 능력은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는 직접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군도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적극 시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 군이 밝힌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이해된다. 김광진 전 국방장관은 지난 2월 1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핵무기는 절대 무기고 핵무기 투발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함으로써 '선제타격'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물론 이러한 '선제타격'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제한적이기는 하다.

'선제타격'은 탐지 → 식별 → 결심 → 타격 순서로 진행되는 이른바 '킬 체인(kill chain)'을 일컫는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180~300km의 탄도미사일만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후방기지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 800km 탄도 미사일을 2015년까지 조기 전력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보다 효율적인 탐지능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현재 탐지와 식별은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대외적 군사협력 강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화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한·미 군사훈련 강화 및 동맹관계 강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그 종류도 다원화하여 전방위적인 대북 군사적 위협 상황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미 군사훈련 강화는 북한의 도발적 태도 강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토록 하여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도발로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개입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을 중국에 적극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증대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강력한 핵보복을 단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이 대남 핵공격을 감행하면 전술 및 전략핵무기로 몇 십배, 몇 백배의 핵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공격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핵 보복공격을 즉각 감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될 경우 미국의 핵보복 역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배치하게 될 경우 미국 핵우산의 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은 실현하기 힘든 ‘선언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 핵우산의 이 같은 결함을 인식하고 대남 핵위협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위협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미국의 핵우산 적용의지를 북한에 한층 더 직접적으로 각인시켜 줄 수 있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기능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균형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완전히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로 남북한의 군사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적 핵무장, 현책 아니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한국의 제한적인 핵무기보유가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남한의 핵공격 우려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공격조차도 제한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의 핵전력이 동원되어 남한을 결정적으로 도와 승리로 이끌게 될 것을 믿지만 그것이 남한을 공격받지 않게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이미 심대한 파괴를 가져온 실패가 되니까 전쟁 도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대남 군사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남한의 독자 핵무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국 지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핵무장권을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전혀 활용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표방하였다. 특히 한국은 1992년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까지 포기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핵무장권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다. 이같이 한국이 비핵국 지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핵무장권을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혀 활용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표방한 것은 외부, 즉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방위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실 상 유명무실화되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보장 약화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권 확보문제가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핵무장권은 미국의 대한국 방위보장 확인을 위한 외교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같이 독자 핵무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한이 당장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한국이 핵개발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개하고 핵무장권의 실제적 행사로 군사 및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핵무장론은 결코 현책(賢策)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핵정책은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의 핵주기 완성을 위해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재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최소한 일본식의 핵잠재능력을 갖출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군사적 신뢰구축 회담의 단계적 추진

북한의 3차레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발적 혹은 비정상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분쟁을 예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핵 혹은 재래식 부문에 있어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즉 CBM을 발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남북군사대화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미사일 시험발사의 사전통고, 핵실험에 대한 일방적 모라토리엄 지속 및 핵과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앞서 남북이 함께 서명한 비핵화 공동선언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군사회담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정당화하고 국제적 제재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될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을 강행하고 난 후 대화협상 모드로 나온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남북군사대화 제의가 있을 경우 이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 정착에 목적을 둔 진정성 있는 것이라기보다 '대화를 위한 대화' 공세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사전에 치밀하게 대남비난공세를 가하면서 그들의 핵실험에 대한 정당성과 대남 군사위협과 비난을 가하는 무대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군사회담은 북한이 당장 제의해 온다고 해도 바로 실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중단 등 진정성 있는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회담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ST**



▶▶ 북한 아나운서가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하고 있다.